

기념사업으로 본 '5·18'의 의미 변용

민주성지, 문화도시, 인권도시를 중심으로*

정호기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한국전쟁 이후에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5·18' 만큼 사회적 기억의 편차가 컸던 경우는 드물 것이다. 5·18은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에 비해 의미의 변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그래서 이 글은 먼저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5·18의 의미가 변용되었던 배경과 논리를 파악하고, 이것이 5·18기념사업의 관점과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한다.

5·18기념사업에 관한 인식과 형태는 2000년을 전후하여 크게 달라졌다. 이전 시기의 기념사업은 사회운동 논리가 제도화의 논리로 일정하게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민주성지와 성역화의 담론이 중심을 이루었고, 기억투쟁의 성격을 띠었다. 반면 이후의 시기에는 5·18의 의미가 문화도시와 인권도시를 조성하는 역사적 자원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5·18의 의미는 때로는 지역 발전 담론으로 전유되었고, 때로는 도시차별화 전략의 소재로 채택되었다. 이에 맞추어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던 형태도 기억투쟁형에서 유산산업형으로 달라졌다.

KEYWORDS 5·18민주화운동, 의미 변용, 기념사업, 민주성지, 문화도시, 인권도시

* 심사위원님들의 포괄적이면서도 세심한 논평에 감사드린다.

** junghghg@hanmail.net

1. 머리말

한국에서는 제국주의와 전쟁의 유산으로 인해 실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들 가운데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은 작금에도 빈번하게 정치·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놓이고 있다. 또한 5·18은 지역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역사적 소재이며,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정치에서도 상당한 폭발성을 갖는 현안이다. 5·18은 사건이 발발한 지 8년 만에 ‘폭동’, ‘사태’, ‘난동’ 등으로 규정을 받던 낙인과 명예로부터 공식적으로 벗어났다. 1997년부터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에 생방송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례와 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5·18과 5월 운동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과 피해 그리고 민주화의 질곡, 인권 유린, 항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되새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5·18은 지배체제의 진상 은폐와 탄압 그리고 안보 이데올로기를 활용한 낙인을 극복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의 반전을 이룬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해도 손색이 없다.

그렇지만 5·18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긍정적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없게 한다. 최근 몇 년에 걸쳐 반복되었던 기념식을 둘러싼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의 반목과 갈등이 증명해 주듯이, 5·18에 관한 사회적 기억은 여전히 혼재된 인식들의 격론장이다. 이런 양상은 5·18에 관한 호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호명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기억 상태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다. 사람들이 호명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회적 기억을 크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호명은 사회구성원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 효과를 드러낸다. 그리고 호명은 공식적 권위를 갖는 당시의 사회적 기억이 무엇이며, 후대에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5·18은 1988년 정부의 재평가를 계기로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었고, 그 명칭이 일반화되었다(허윤철 외, 2012). 그렇지만 ‘의거’, ‘항쟁’, ‘항거’, ‘봉기’ 등이 보다 적절한 호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하다. 한편에서는 신군부의 주장을 반복하거나, 표현 방식은 다를 지라도 유사한 논리를 강변하는 세력들도 실재한다(오승용 외, 2012; 김희송,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5·18의 정치·사회적 평가와 위상은 공식 영역과 비공식 영역 모두에서 교착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호명과 다소 차원을 달리할 수 있다. 의미 혹은 성격은 호명과 긴밀한 상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역사적 사건의 계승 혹은 전유에서는 다양한 담론들이 혼재되어 있거나 변용될 개연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단순하지만 널리 활용되는 변인들인 직접적 경험 여부와 세

대의 차이를 연계시켜 살펴보면, 그 간격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으로 범주화되고 있는 다른 사건들과 5·18을 비교해 보아도 계승과 전유의 내용이 다름이 드러난다. 이를테면 대구의 '2·28민주운동'은 민주운동을, 창원(마산)의 '3·15의거'는 자유·민주·정의를, '4·19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을, '6월민주항쟁'은 군사독재 종식 계기와 시민운동 발전을 각각 중요한 의미로 표방한다. 그러므로 5·18은 의미 도출의 폭이 넓고 다양하게 전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5·18이 분단체제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 정치와 이념 갈등 그리고 민주화의 내실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및 실천과 관련이 깊다는 것에서 연유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5·18 담론과 의미를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들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5·18에 관한 담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경우로, 전재호(1999)와 이용기(1999)를 들 수 있다. 전자는 5·18 담론의 실천 범위를 둘러싸고 정치권, 시민사회, 지역들, 광주·전남 지역 내부 등이 어떻게 분화되었고 대립했는가를 규명했다. 후자는 역사책을 중심에 두고 대중용, 배포용 책자들을 부수적으로 검토하여 5·18이 어떻게 명명되고 서술되었는가를 보여 주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글들은 5·18의 제도화에서 민주화 담론만 수용되었고, 민중 지향적 성격의 담론은 배제되었다고 보았다.

둘째, 5·18이 어떤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경우다. 이 글들은 5·18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시기와 시대의 현실에 따라 재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고찰한 연구들로는 정근식(1997)과 최장집(2007)을 예시할 수 있다. 전자는 국가가 주관하는 5·18기념사업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서 성역화 딜레마가 시작되었고, 5월운동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균열이 확대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후자는 민족·민주·민중으로 해석되었던 5·18의 의미가 평화와 인권, 민주로 전환했는데, 민중적 요소는 약화된 반면 정치 엘리트들에 의한 대중동원의 개연성은 확대되었음을 지적했다. 10년의 간극을 두고 발표되었던 두 글은 5·18의 재의미화가 의미하는 분명한 차이를 인지할 수 있게 해 준다.¹⁾

셋째,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프로젝트들에서 5·18이 어떤 의미를 갖고 활용되었는가를 밝힌 경우다. 류재한(2007), 박해광·김기곤(2007), 최정기(2008), 김기곤(2009; 2010; 2011), 김영기·김혜선(2013)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전공에 따라 강조점에서

1) 이러한 변화의 과도기에 제기되었던 고민을 반영한 글이 나간채(2004)이다. 그렇지만 당시는 5월운동의 관점과 인권운동의 관점이 갖는 차이를 명확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도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광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인권도시 지향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그리고 5·18을 둘러싼 여러 세력들의 관계와 견해의 차이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5·18 담론과 의미가 고형성과 가변성을 함께 갖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기념사업²⁾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5·18의 의미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달라졌으며, 기념사업의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즉, 5·18기념사업의 성과가 구체화되는 결과물인 기념 시설 또는 기념 공간의 사회적 생산 논리들을 일관되게 보여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공간의 사회적 생산은 의미와 가치를 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하는 것이 관건일 이룬다. 역사적 사건의 의미화는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 사회적 정체성은 포함이자 배제이며 집단의 정체를 보여 주는 동시에 다른 집단과 구별하는 것이다(Cuche, 2004/2009, 141쪽).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5·18에 관한 사회적 정체성에서 포함과 배제 그리고 구별의 가장 기본 단위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5·18에 관한 의미화의 정체성이 계급, 계층, 세대, 신분 등을 기준으로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사건의 원초적 공간으로 빈번하게 회귀되면서 실체화되는 보다 분명한 귀결지점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기념사업의 시각에서 5·18의 의미 변용이 이루어졌던 배경과 논리를 파악하고, 이들이 기념사업을 추진했던 관점과 형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이 글은 5·18에 관한 사회적 기억이 사회운동의 지평에서 인식되었던 시기가 있었고, 재의미화를 통해 문화도시와 인권도시 담론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한 시기가 있었음을 전제로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 기념사업은 기념물과 시설 등의 건립과 같은 유형의 사업과 정신계승과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무형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기념사업은 주로 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

2. 사회운동 논리에서 제도화 논리로: 민주성지와 성역화

1) 사회운동의 논리

5·18의 상흔을 기념물로 치유하려는 행위는 1981년에 처음 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³⁾ 임균수⁴⁾를 추모하는 뜻을 담은 나무를 심고, 이를 알리는 팻말을 설치했던 것이 첫 사례였다. 5·18에 관한 기념을 보다 집합적인 차원에서 실행하려는 활동은 1985년에 이르러 등장했다. 5월 17일 ‘전남민주청년협의회’의 주도로 광주YWCA 6층에서 이루어졌던 ‘5·18의거 자료전시관’ 개관은 즉각 공권력이 투입되어 무산되었다.⁵⁾ 한편 5·18 관련 단체들을 비롯해 사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던 15개 단체들이 결성했던 ‘5·18광주민중혁명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이하 5추위)’는 위령탑과 기념관 건립을 추진했다. 5추위는 전남도청 앞에 위령탑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자 ‘항쟁 기념메달’을 제작·판매했는데, 불과 4일 만인 9월 24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당국에 포착되어 중단되고 말았다.⁶⁾ 5추위의 활동은 구상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겨졌고, 5·18 기념사업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들은 5·18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5·18을 기념하려는 활동들이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으며, 국가의 공식기억과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음을 잘 보여 준다.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광주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목격되었다. 아래의 신문 기사들이 보여 주듯이, 희생자들이 주로 안장되었던 ‘망월묘역’⁷⁾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던 것이다. 방문객은 계절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망월묘역과 광주를 찾았다. 대학가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순서에 ‘망월묘역’ 참배를 포함시켜 학생들로 북적였다. 특히 4~6월에 망월묘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5월에 정점을 이루었다.⁸⁾

3) 시민사회가 주도했던 5·18 기념물 혹은 기념시설 건립과 쟁점 그리고 의미 등에 대해서는 정호기(2012)를 참조하기 바람.

4) 임균수는 1959년 8월에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출생했으며, 광주 인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 5월 당시 원광대학교 한의학과에 재학하고 있었다. 그는 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으며, 17일 자정을 기해 계엄령이 확대 선포되면서 휴교령이 내리자 가족이 거주하던 광주로 왔다. 5월 20일부터 시위에 참여했으며,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쏜 총탄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5) “광주 5·18 관련 단체들의 활동”(1987). <월간 조선> 8월호.

6) “5·18 그 후(2)-위령탑 건립”(1988. 5. 16). <광주일보>. 10면.

7) 이곳에 관한 명칭은 광주시립공원묘지, 망월동공원묘지, 5·18희생자묘역, 망월동묘지, 5·18묘지, 망월동 5·18묘역, 망월묘역 등으로 다양하다. 공공 기록물상의 명칭은 광주시립공원묘지 제3묘역이다. 이 글에서는 망월묘역으로 명명했다.

5·18희생자묘역을 찾는 참배객이 늘고 있다. 5월 18일이나 명절을 전후해 유족이나 재야 인사들만이 찾던 망월동묘역에 최근 들어서는 일반 시민을 비롯해 대학생, 외지의 관광객 등까지 관심을 갖고 들르고 있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5·18희생자묘역 참배 등을 과정에 넣어 예년과 달리 망월동공원묘지가 활기를 띠고 있다.⁹⁾

5·18에 대한 평가가 재인식되면서 광주시 북구 망월동 광주시립공원묘지 5·18희생자묘역을 찾는 참배객들이 늘고 있다. 특히 신학기인 요즘 일부 대학생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5·18희생자묘역 참배를 과정에 넣기까지 하고 있다.¹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요인들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87년 대통령 선거운동 국면에서 5·18의 진상 규명, 성격의 재규정, 그리고 피해자와 지역민의 명예회복과 보상 방안이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조현연, 2001, 728쪽). 5·18의 명예회복과 치유 대책은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을 가시화할 수 있는 당시 최고의 정치·사회적 화두였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었고, '민주화합추진위원회' 결성되어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 위원회는 1988년 1월 16일 첫 모임을 개최하고 2월 23일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한 건의〉라는 제목의 종합건의서를 채택했다. 대중매체들은 이 위원회의 활동과 5·18에 관한 내용을 매일 크게 보도했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5·18에 관한 재조명 활동은 시민들에게 망월묘역과 5·18의 주요 현장을 방문하도록 자극했다.

둘째,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학생 자치 조직의 결성과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회 전반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결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체와 조직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추동했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자원이자 집단의를 형성하게 했던 구심점을 5·18에서 찾았다(김동춘, 2001, 607쪽). 이들 대부분은 민주주의가 여전히 지체되어 있으며, 민주화운동이 계속 전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불이익을 넘어 인생의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8) 1988년 5월 18일 당일 망월묘역을 방문한 사람이 3만 명 이상이었다. "광주 애도 철시, 검은 리본 물결" (1988, 5, 19). <경향신문>. 1면.

9) "5·18묘역 참배 잇달아"(1988. 2. 27). <광주일보>. 15면.

10) "망월동묘역에 참배객 몰려"(1988. 4. 13). <조선일보>. 15면.

활동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의지와 각오 그리고 의식이 요구되었는데, 망월묘역과 광주
의 도심을 방문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셋째, 1980년 5월 이후에 등장한 5월운동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었거나 사망
한 사람들이 망월묘역에 추가로 안장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망월묘역에 안장됨으로 인
해 5·18이 포괄하는 범위와 의미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것은 5·18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사건임을 반복해서 각인시켰다. 특히 6월민주항쟁 과정에서 사망했던 이한열의 망월
묘역 안장은 이곳의 신성한 가치를 널리 전파시켰다. 이로부터 1990년까지 광주·전남 지
역과의 연고 여부를 가리지 않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를 망월묘역에 안장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정호기, 1996, 262~266쪽). 이것은 망월묘역 및 광주와 인연을
맺은 집단과 조직이 다양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뜻했다. 5·18의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고
자기화하는 사람들의 증가는 5월운동을 지지하는 기반의 공고화로 나타났다.

망월묘역의 집단 참배와 5·18의 현장 답사는 광주를 ‘민주성지’로 탄생시키는 과정
이었다. 노태우 정부가 출범 직후에 망월묘역을 개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
자,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성역화’사업이라고 명명했다.¹¹⁾ 성역화는 망월묘역이 성
지임을 표방하는 것이었고, 성지는 전남도청과 그 일대를 비롯해 5·18의 주요 현장까지
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5·18의 의미와 진상을 되새기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
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지칭했고, ‘광주가 순교자의 성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다’
고 평가하기도 했다.¹²⁾

성지라는 인식과 사회적 정체성은 동일시를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타
적 정체성(hetero-identity)’ 혹은 ‘외부 정체성(exo-identity)’을 통해 강화되는 것이기도 했
다(Cuche, 2004/2009, 146쪽). 그러므로 민주성지 광주의 정체성과 이미지는 광주 시민의
주장이었지만,¹³⁾ 동시에 지역 외부에서 광주를 규정했던 것이었다. 실제로 당시에 단체 방
문들에게 배포되었던 자료집에는 ‘민주화의 성지’, ‘항쟁의 성지’, ‘민족성지’ 등으로 명명되
었던 경우가 많았고, 광주 도심에서의 거리 행진을 ‘성역지 대행진’ 등으로 일컬었다. 방문
객에게 5·18에 관한 경험과 인식을 공유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것은 장소성과 현
장성이었다. 방문객들이 주로 찾는 장소와 공간은 대체로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었는데,

11) “5·18묘역 성역화 추진 활발”(1988. 4. 9). <광주일보>. 11면.

12) “5·18 그 후(3)-격랑의 현장”(1988. 5. 17). <광주일보>. 10면.

13) 5·18 제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제작되었던 <성지를 찾아서>라는 안내 자료집에서는 ‘민족민주성지’와 ‘민
족운동의 성지’라는 용어도 발견된다. 이는 사회운동 진영의 주류가 갖고 있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5월 당시의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 장소와 공간은 광주 내에서도 특별한 위상과 의미를 갖는 곳이었지만, 방문객들은 광주 전반의 이미지로 일반화시켜 이해하곤 했다.

민족성지 광주 방문 및 조성만 열사 묘소 참배를 위한 순례를 제안하며
 조성만 열사 장례식 당시 관악 학우 1400명이 광주를 방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혁명의 도시 해방의 도시 광주 시민은 저희들을 정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
 민족의 성지, 혁명의 도시로! ...

통일 염원 45년 5월 일

광주순례단 준비위원장 윤운상¹⁴⁾

방문객들은 광주와 광주 시민이 척박한 환경에서 민주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신들의 고충과 애로를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믿었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또한 방문객들은 광주와 광주 시민은 다른 지역들과 다른 정서와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광주는 특정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갖는 도시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입장과 견해를 달리하여 살펴보면, 이것은 부정적인 정체성과 이미지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¹⁵⁾

2) 제도화 논리

민주성지 광주의 이미지와 지역 정체성은 망월묘역이 새롭게 조성되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널리 지지를 받았으며, 여러모로 유용한 담론이었다. 관료적 발상으로 기념사업이 추진되던 초반 무렵에도(5월 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 모임, 1994, 38쪽), 지방정부는 시민사회의 견해를 일부 수용하여 5·18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는 광주시가 1993년 11월 27일 '5·18묘역 성역화에 따른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실시했던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관료 조직의 특성상 김영삼 정부가 선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4·19묘지 성역화' 사업을 답습한 측면도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시민사회는 성역화라는 용어가 포괄하는 의미를 보다 확장했다. 관 주도의 5·18묘지 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

1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Open Archives

15) 1995년에 이루어진 '전남이미지 실태 연구'에 따르면, 비호남 출신자들은 전남 지역민들의 인성이 '과격하다'는 데 59.2%가 찬성의사를 밝혔고, 18.6%만 반대의사를 밝혔다(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 1995, 106쪽).

해 시민사회가 1993년에 결성했던 '5월 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이라는 단체명은 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단체는 12월 9일 개최한 '시민공청회'에서 5·18기념사업은 '5·18의 진상과 계승'이라는 내용을 담은 그릇'이며, 5·18묘지 조성은 '5월 성역화' 사업의 첫 사례임을 명시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5월 성역화'는 '민주성지'로 대체되었고 재정립되었다.

민주성지는 5·18을 제도권의 공식기억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광주의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었다. 우리는 이를 전남일보사가 1994년에 발간했던 〈5·18광주기념사업을 위한 세계 민주성지를 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해 5월 12일 공개되었던 〈5·18광주민중항쟁 기념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에서 박만규 교수가 발표했던 “정신 계승과 관련된 무형의 기념사업에 대하여”라는 글에도 이러한 점들이 담겨 있다. 이 책과 글은 관 주도의 기념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담보 상태였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인한 의미와 평가의 역진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대내외적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하는 기념사업에서 민주성지는 호평을 받기에 적절한 화두였다.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1995년에, 전라남도가 1998년에 발간했던 〈5·18기념사업 종합계획〉은 모두가 '민주성지 광주'의 지향을 전제로 했다.¹⁶⁾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전자라고 할 수 있는데, 5·18기념사업이 종합성을 결여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수용된 성과물이었다. 그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비판과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 다수가 위의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참여했다. 1997년 4월부터 시작되었던 '5·18사적지 보존사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되었다(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그러므로 2000년 이전에 계획되고 실행되었던 5·18에 관한 각종 기념사업들은 민주성지 광주 담론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⁷⁾ 이 계획들의 원칙은 5·18의 현장 보존과 복원을 전제로 했으며, 이를 통해 5·18의 의미를 기억하고 계승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였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과 경향은 점차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조짐이 표면화되었던 주요 계기는 새로운 묘지 이장 대상자에 관한 기준을 만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¹⁸⁾ 1997년에 광주에서 이에 관한 공청회와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서로의

16) 두 계획서는 5·18정신을 항쟁정신, 대동정신, 민중·민주운동의 역사적 정신 계승으로 정리했다. 문화와 인권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17) 5·18기념사업을 '성역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002년에 제기된 바 있다(허연식, 2002, 40쪽). 그렇지만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계획했던 5·18기념사업이 대체로 완료되었던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18) 광주광역시(1995)에는 5·18묘역성역화사업 후 안장 대상자를 '5·18 및 민주화 관련희생자'라고 명시했다.

입장 차이를 확인했을 따름이었다.¹⁹⁾ 이 과정에서 생겨난 소원함과 거리감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후속되었다. 하지만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한국 사회 근간을 뒤흔들었던 경제 위기가 급습했고,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했으며 민주화운동과 인권의 이미지로 표상되었던 정치인이 대통령에 선출되었던 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사회운동의 성격과 주요 의제가 달라졌고, 5·18의 위상과 의미도 바뀌어야 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망월모역과 5·18 관련 시설들에 대한 방문자는 점차 감소세를 띠어 갔다. 어느 순간 5·18은 사회구성원의 공감대에서 주변화되고 있었다. 기념사업으로 생산된 공간들이 속죄의식과 성스러움의 심성을 무너지게 하는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광주시는 1998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했다. 그래서 '5·18 정신계승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5·18 성지순례단 유치 대책'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방문객들이 당면한 현실에 기반을 두어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찰하기에는 제도화의 성과가 낮설게 다가왔고, 5·18에서 사회운동 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더 이상 새롭지 않았던 것이다. 5·18을 매개로 한 민주성지 광주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가면서 5·18의 상징적 장소와 현장을 찾는 자율적 방문객과 순례자도 점차 감소했다. 그 공백은 제도적 기구들에 접속되어 있는 학생들로 점차 대체되어 갔다.

3. 의미의 변용: 문화도시와 인권도시

5·18기념사업은 1990년대 중반에 개시되었고, 2000년 이전에 대체로 일단락되었다. 5·18기념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전남도청 이전이 완료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되리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었다. 반추해 보면 바로 이 국면에서 5·18의 사회적 기억은 변화하고 있었다(김두식, 1998, 248~254쪽). 민주화운동이라는 의미와 사회운동의 지평에서 추진되었던 5·18에 관한 기념 행위의 동력은 20주년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소멸되는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5·18의 청산을 위해 제시했던 5대 과제가 일단락되었던 것이 미친 영향이 컸다. 특히 5월운동의 마지막 미해결 과제였던 두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을 비롯해 주요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던 것이 결정적이었다(나간채, 2007, 5쪽). 가해자들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일부 시민사회의 동조 혹은

19) 이때의 갈등과 견해 차이가 경기도 이천시에 '민주공원'을 따로 조성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목인으로 곧 사면·석방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5월운동이 종착점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던 것도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의 효력이 약화되었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첫째, 한국은 1997년 말에 밀어닥쳤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과 민주적 공고화가 권위주의적 양태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강문구, 2003, 294쪽). 하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정부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사회운동의 영역은 급격히 위축되었다(박기덕, 2006, 294쪽). 둘째, 순탄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를 청산하기 위한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고 추진되었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과 같이 민주화운동에 관한 정책들이 실행에 옮겨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사회구성원의 관심은 5·18에서 다른 민주화운동들과 의문사 등으로 이동했으며, 더 나아가 근현대사의 다양한 과거사에 대한 청산운동이 주시를 받았다.

이와 같은 한국의 정치·사회적 정세는 5·18의 의미와 정신 계승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했다(정근식, 1999, 160쪽). 그리하여 사회운동의 지평에서 정립되었던 5·18의 의미 및 가치를 제도권과 다양한 시민사회 견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사회운동 지평에서 이루어졌던 5·18의 의미화를 폐기하거나 전면적으로 대체해야 할 만큼 압력이 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대표 표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는 5·18에 대한 사회운동적 의미화가 광주의 긍정적인 정체성과 이미지로 계속 작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광주가 ‘항쟁의 도시’, ‘저항의 도시’라는 강성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거나 유연화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속삭임은 차츰 목소리를 키워갔다. 그러면서 사회운동적 의미를 축소·우회·약화시킨 의미부여와 해석의 필요성은 강조되어갔다.²⁰⁾ 이것은 5·18이 20여 년 동안 구축해 놓은 정치·사회적 위상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갈구해왔던 의제들, 특히 지역발전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거나 지역정체성을 전환시키려는 욕구를 추동했다.

그런데 광주에는 민주성지와 병행하여, 아니 어쩌면 그보다 일찍이 지역 이미지로 정착되기를 희망했던 담론이 성장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향이였다(정근식,

20) 2002년 (재)광주비엔날레와 (재)5·18기념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했던 ‘기억·장소·축제: 5·18 역사공간을 어떻게 문화공간화 할 것인가?’라는 학술행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 주었다.

1999, 164쪽). 예향 광주는 전통적 성향과 민중적 성향으로 양분되어 있었고, 각각 안정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발생의 연원과 역사로 보면, 민중적 성향은 근래에 등장했던 것이었으나, 5·18과 5월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성장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이 무렵 광주에서는 두 세력이 호각세를 이루었다. 두 세력은 예술에 관해 상당한 시각차를 갖고 있었다. ‘문화도시’는 두 세력의 차이를 아우를 수 있는 광의의 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예향과 문화도시를 동일시하기는 어렵지만, 예향이 문화도시론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배경이 되었던 것은 확실했다(류재한, 2007, 120쪽) 문화도시의 관점에서 광주 지역의 공간을 재구성하려는 구상은 5월운동의 동력이 소멸되고 있던 무렵부터 모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1999년 말에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한 국회의원은 광주가 ‘문화예술 관광산업’을 크게 부흥시켜야 하며, “5·18정신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광주가 ‘인권의 상징 도시’로 불리고 있다고 단언했다(광주광역시 문화예술기획과, 1999, 137~157쪽).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기본 체계를 갖추게 되었던 계기는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광주광역시, 2000). 기본계획에서 주목하여 살펴볼 점은 ‘복합문화지구’에 세계문화예술사박물관, 세계인권박물관, 지방행정박물관으로 구성되는 인권평화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인권평화박물관이 조성될 장소는 오래 전부터 5·18기념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중론이 모아졌던 전남도청 이전 부지였다.

이러한 논지는 ‘이전 예정인 도청부지 일대를 중심으로 광주 도시의 역사적인 공간들을 보존·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으나, 일부 건물은 해체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담았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의견 제시였을 뿐 효력을 지닌 확정안은 아니었다. 세계인권박물관의 주된 구성 주제가 5·18임을 밝히고 있지만, ‘인권’과 ‘평화’를 전면배치한 것은 시선의 전환을 의미했다. 그리고 “생명문화지구”에는 민주·인권공원 조성 및 5·18유물관 확충이 포함되었다.²¹⁾ 기본계획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생명과 평화라는 미래지향적 이념과 결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것은 5·18이 이전과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시기임을 시사했으며, 5·18을 재의미화하고 새롭게 전유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고 있었음을 뜻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경계지점 어디엔가 위치했다고 볼 수 있다.

21) 민주·인권공원은 광주시 외곽에 민주화운동기념관, 민주공원, 인권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었고, 5·18 유물관은 국립5·18묘지 내에 건립한다는 것이었다.

2003년에 착수된 광주문화도시조성사업(이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개칭)은 광주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들로 채워 놓았다(문병훈, 2014, 79쪽). 노무현정부가 광주에 큼지막한 선물을 준 것처럼 홍보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광주의 다른 의제들과 미래에 관한 문제의식들을 부차화하고 일원화하는 효과도 지녔다. 문화도시의 바람은 광주를 비롯한 호남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불균등 발전 담론의 적절한 대안처럼 홍보되는 측면이 담겨 있었다(박해광·김기곤, 2007, 61쪽). 특히 ‘문화로 밥 먹고 산다’라는 담론이 발산하는 효과와 파괴력은 가히 압권이었다. 이러한 선언적 주장에 대한 이견들은 꺾히지 일췌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이라는 높은 파고에 5·18에 관한 사회적 기억이 휩쓸리는 것은 불문가지였다. 결국 그 여파는 5·18기념사업을 매개로 크게 폭발했고, 지역사회 시민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2004년 9월 9일 아시아문화전당 부지를 전남도청 일원으로 결정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부지의 조사 단계에서 우려와 부정적인 여론이 활발히 제기되었지만(박해광·김기곤, 2007, 55~57쪽), 끝내는 강행되었다. 그동안 많은 논의와 토론 그리고 갈등의 주제였던 5·18기념관 건립에 관해서는 달리 언급되지 않았다.²²⁾ 그러면서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로 ‘의향’이 제시되었다. 의향의 주요 근거는 5·18이었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 의미가 유지될 것이고, 5·18이 중심에 놓인 상태로 기념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를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발간되었던 각종 홍보 자료와 보고서들에서 하나 같이 5·18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자산으로 언급했기 때문이었다.²³⁾ 전남도청과 그 일원이 5·18의 주요 현장이었으므로, 그 의의와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언급했던 것도 주효했다. 그런데 이것은 5·18에 관한 기존의 의미 부여와 문화도시로 인한 재의미화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렇다면 기존의 의미는 목적을 이룬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언된 것이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정신적 상징인 구 전남도청과 그 주변에 건립되어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소통과 상생의 문화로 승

22)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백서> (문화관광부, 2008, 82쪽)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전당 부지 전당 과정에서 전남도청과 그 일대에 관해 기존에 수립되었던 여러 종류의 기본계획들을 검토하고 고려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5·18 기념관 조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23) 2005년 5월 18일 실시된 ‘(가칭)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공고’의 설계지침에서 4개 항목의 ‘이념, 가치관’을 제시했는데, 두 번째가 “‘민주화 성지’로서의 광주의 의미”를 구현하라는 것이었다.

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자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73쪽).

인권도시는 문화도시보다 앞서 제기되었던 5·18을 근간으로 하는 대표적인 재의미화 담론이었다. 1998년 열린 제18주년 5·18 기념행사 주제는 ‘인권·평화·화합의 미래’였다. 이 주제에 맞추어 한국사회학회는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18광주민중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한상진 교수는 “이제는 협소한 정치적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보편적인 가치에 관심을 갖고 국제적 비교연구를 통하여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도덕적 재산으로 5·18의 의미를 가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한국사회학회 편, 1998, 57쪽).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0년 이전부터 언급되었던 ‘인권도시’ 개념은 광주시 북구청이 추진한 ‘민주·인권 가상 체험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에서 ‘인권도시’ 또는 ‘민주·인권도시’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광주광역시 북구, 2000). 물론 이것이 추진되었던 주요 배경과 이유도 5·18에서 도출되었고, 인권도시는 민주성지의 현재적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러므로 2000년을 기점으로 광주 지역에서는 5·18을 인권 또는 인권도시로 재의미화하려는 구상과 문화도시의 소재로 재구성하려는 구상이 거의 동시에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도시 담론의 바람이 워낙 거세었기 때문에, 인권도시 담론은 한동안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야 했다.

광주시의 인권도시 지향은 2007년 ‘인권증진및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의 단초를 마련했다. 광주 지역의 중요한 실천 정책으로 인권이 크게 주목을 받았던 시점은 문화도시를 중심으로 편재되었던 청사진의 거품이 어느 정도 걷힌 이후였다. 즉, 인권도시 만들기의 정책적인 이행은 2010년 민선 제5기가 출범하면서 ‘세계 속의 인권·평화공동체 건설’을 시정방침으로 확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강운태, 2014, 1쪽).

2011년 5월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인권도시 담론은 광주가 지향할 도시 정체성과 도시 이미지로 한층 고양되었다. 5·18의 사회적 기억과 가치는 인권과 인권도시의 맥락에서 변용되었고, 이러한 기반에서 5·18에 관한 기념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선언되었다. 인권도시 실현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될 때,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참여와 연대가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김기곤, 2013).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개념과 지향이 갖는 보편성과 포괄성을 고려할 때, 인권도시 담론으로 5·18의 재의미화는 광주만의 특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영기·김혜선, 2013, 161~162쪽). 위로부터 주도되는 정책 프로젝트의 성격을 넘어

서는 인권도시가 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반은 무엇인지, 인권도시가 5·18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포괄하거나 배제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한 권력관계와 지역 정치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것은 건물과 장소를 짓거나 개조하고, 몇몇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도입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에는 깊이 숙고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5·18의 지역화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이었다. ‘권력담론의 일부로서 5·18담론은 지방화 될 위험에 다분히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점점 현실화되어 갔다(정일준, 2004, 120쪽). 이러한 현상은 문화도시와 인권도시를 주창하는 과정에서 5·18의 의미를 광주를 특화하는 소재와 전략으로 애용하면 할수록 심화되어 갔다. 사회운동의 지평에서 5·18이 해석될 때에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한국을 비롯하여 민주화되지 못한 여러 국가들로부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용이했지만, 5·18을 광주를 표상하는 역사적 문화상품으로 재정립하자 보편적 성격이 급격히 지역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다양한 과거사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청산작업이 진행되면서 다른 지역들에서도 역사적 사건을 자원화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4. 의미의 변용과 기념사업의 관계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기념물과 기념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념물과 기념시설을 조성하는 방법과 의도는 역사적 사건이 갖는 시대적 위상, 가치화와 의미 부여, 관련 주체들의 의지와 역할 등과 같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형상화되었다. 일반적으로 기념사업은 추진 방법과 결과에 따라 신설, 훼손, 현장 보존, 부분 보존(개조), 복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5·18의 의미를 특성화하는 담론과 기념사업의 형태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운동의 논리에서 고찰할 수 있는 기억투쟁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화의 논리에서 고찰되는 유산산업의 측면이다.

1) 기억투쟁: 신설과 훼손 그리고 현장 보존

5·18기념사업은 민주성지가 대두되었던 1990년대 중반까지는 사회운동의 지평 위에서 기억투쟁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억투쟁은 왜곡과 은폐 그리고 부정의에

대립하여 진상 혹은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기억의 정치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5·18기념사업은 5·18에 관한 기억투쟁과 5월운동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 엄중하던 시기에는 인정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일정하게 재평가되면서부터는 제도화의 방법과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5·18기념사업의 형태와 어떤 상관성을 이루었을까?

전반적으로 5·18기념사업은 신설형의 관점에서 고려되었다. 신설형은 5·18의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고 공고화하는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상징물과 기억의 장소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5·18의 공식 담론을 바로잡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신설형 기념사업은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고려되었고, 실로 치열한 갈등과 대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5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 주도의 기념사업이 추진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신설형은 공간과 장소의 활용이 용이한 곳에서 주로 실현되었다. 새로운 5·18묘지와 5·18기념공원 조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원형 보존을 둘러싼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민주성지 담론과 신설형이 충돌할 접점이 적었던 것이다. 이보다는 민주성지의 의미가 신설형 기념사업에 적절히 반영·재현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쟁점이었다.

훼손형 기념사업의 사례는 드물었다. 통상 원형을 훼손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기념 행위라기보다는 사회적 기억을 지우거나 축소·약화시키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발상의 관점에서 훼손된 시설들이 기념물로 활용되기도 했다(Bevan, 2006/2012, 15쪽). 5·18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동일시되는 기념물이나 상징물을 해체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로 표출되었다. 이것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민주성지 광주를 상징화하는 데 부합했다. 망월묘역 초입에 파손된 상태로 매설하여 방문객이 밟고 지나가도록 한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분 민박마을' 기념비는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두환이 상무대 무각사에 기증했던 범종을 회수하여 기념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5·18의 주요 현장과 관련 시설의 원형보존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표면화되었다. 5·18의 현장 훼손과 해체 등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의식은 뒤늦게 등장했다. 광주의 시민사회 내에서는 관련 현장들의 모습과 경관이 달라지면서 장소성이 변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인식들이 생겨났다. 5·18의 현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달라진 장소와 공간에서 공감대를 찾기에 난감해했다.²⁴⁾ 그런 와중에 관련자들의

24) 광주시내의 주요 5·18 격전지를 어렵게 찾아 봤으나, 5·18 당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조그마한 단서조차 찾

다수가 연행·구금되었으며 재판을 받았던 상무대 영창과 법정 등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고려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해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²⁵⁾ 이 일은 현장보존 여론이 널리 확산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이루었다. 현장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건의 생생함과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5·18의 사회적 기억을 존속시키고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하다고 하면서 새삼 부산스러워졌던 것이다. 하지만 사적재산권을 강제하고 공공적 활용을 규제하면서 현장을 보존시킬 수는 없었다. 그 대안이 5·18의 주요 현장들에 표지 석과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산산업: 부분 보존과 복원

5월운동이 일단락되고 5·18의 의미가 재해석되면서 현장보존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기반이 점차 약화되었으며, 5·18과 5월운동 이후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5·18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아진 것에 비례하여 원초적 사건의 현장보존론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진부한 생각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5·18 현장들은 ‘활용’의 관점으로 조망되었다. 5·18의 재의미화는 5·18을 주요 주제가 아니라, 배경이나 소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이에 관한 논의들은 편차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지역발전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최정기, 2008, 74쪽). 다소 표현을 달리하기는 했으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논리도 여기에서 중요한 근거를 도출했다. 이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들이 옛 전남도청 건물군의 해체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충돌했던 것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현장보존과 개발 혹은 개조를 둘러싼 이견들은 보다 다양한 견해들로 세분화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반복했고, 몇 번에 걸친 협의와 타협이라는 절차를 걸쳐 부분 보존으로 매듭을 지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5·18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과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이해 수준은 민낯을 드러냈다.²⁶⁾ 개발과 변화의 흐름과 압박을 상쇄할 만큼 현장 보존의 타당성과 필요

기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다. 반면에 구 묘지를 찾는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했다든지 아니면 눈물이 쏟아져 내림을 참을 수 없었다면서 숙연함을 간직한 채 돌아갔다고 한다(안종철, 1998, 1쪽).

25) 5·18 기념시설과 공간이 조성되었던 과정을 들여다보면, 지방정부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운동을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하는 태도를 취했다. 즉, 정치적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현실화되면, 실행기구로서 작용을 한 것이지 전체적인 도시계획에서 5·18에 관한 사회적 기억과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반영했던 것은 아니었다(이용연, 1999, 22쪽).

26) 옛 전남도청 건물군의 보존과 해체를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핵심 관계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잔해물은 5·18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관은 2013년 5~7월에 관련자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은 채 건물을 해체했으며, 건물 잔해물 3000톤을 폐기했다. 폐기물은 도

표 1. 2000년대 중반 이후 수행되었던 5·18기념시설 관련 주요 학술용역

발주 시기	발주 기관	학술용역 명칭
2005	국립5·18묘지관리소	국립5·18묘지 시설물 활성화 방안
2006	5·18기념재단	5·18자유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
2007	5·18기념재단	5·18기념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 및 리모델링 연구
2012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성을 제시할 수 있는 논리가 탄탄하게 제시되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다. 쇠락해 가는 원 도심의 활성화라는 현실론이 갖는 힘도 양으로 음으로 영향을 미쳤다. 5·18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이 5월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와 달리, 거의 광주 지역 내부의 갈등으로 축소되어 전개되었고, 지역 외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세력과의 연대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의 복잡한 균열 선과 골을 드러내고 악화시켰다는 점은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을 관류하는 논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폭력의 상흔과 흔적을 ‘유산산업’의 관점에서 재고하기 시작했음을 뜻했다. 심지어 핀켈슈타인(N. G. Finkelstein)이 제기했던 ‘홀로코스트산업(The Holocaust Industry)’과 흡사하게 작동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했다(2003/2004). 지역 발전을 위한 혹은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을 위한 일종의 ‘역사문화상품’으로 5·18을 파악하는 시각이 점차 대세를 형성했으며, 그동안 묻혀 있던 발전하지 못한 보물인 것처럼 각광을 받았다.

5·18 기념시설들은 2000년 중반에 이르러 새로운 난관에 직면하고 있었다. 2000년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설치되었던 5·18 기념시설들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관심과 역할의 한계가 명료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수행되었던 5·18에 관한 각종 학술용역 제목들에서 엿볼 수 있다. <표 1>에서 보여 주듯이 여러 기관들이 5·18관련 기념시설을 어떻게 ‘활성화’ 또는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술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5·18 관련 시설들의 운영이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했으며, 설립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방문객이나 이용객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상품화’라는 시선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로의 기초공사와 매립지 등의 보조기층을 다지는 데 사용되었다. 이상현 (2013, 8, 15). 강운대 탁상행정 ... 잔해물 수거 불가능. <광주인>. URL: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63>

한편 근래에 들어서는 5·18 당시의 현장성을 복원하거나 재활용하는 기념사업들이 대체를 보인다. 5·18과 관련이 있는 건물과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거나 위치가 변경된 시설들을 원래의 장소로 복원시키는 행위들이 주로 진행되었다.²⁷⁾ 또한 기존 시설들을 보존하면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는 방안들도 연구되고 있다.²⁸⁾ 이와 관련한 행위들은 대체로 광주시의 관리와 행정력이 직접 미치는 공간과 장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복원형 기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권도시 지향의 맥락과 담론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여러 행사들에서 만개한 담론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현장의 실제 모습들이 크게 달라졌고 장소성을 상실했는데, 일부 시설을 복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이 시기에 왜 이루어지는가를 곱씹어 보자는 시선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그나마 현존하는 시설과 장소의 원형을 보존하는 일은 미룬 채, 시민의 시선을 끄는 이벤트성 기념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5. 맺음말

어느 시대애나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나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널리 선호되는 방법은 기념물 또는 기념시설을 비롯해 기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기념물과 기념시설은 역사적 사건이 갖는 시대적 위상, 가치화와 의미 부여, 관련 주체들의 의지와 역할 등과 같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형태와 방법을 달리하며 가시화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5·18은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류되는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가장 다양한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만큼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연구 대상임이 분명하다.

5·18기념사업의 전개는 사회적 기억의 존립 형태 및 지향성과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념사업에서 5·18의 의미는 사회운동의 지평에서 사유되었던 민주성지 광주

27) 광주시 금남로에 소재한 옛 가톨릭센터를 건물을 5·18기록관으로 재구조화한 것, 태풍으로 고사한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를 대신할 나무를 식재하고 소공원을 조성한 것, 5·18 당시 전남도청 앞 광장에 있던 시계탑을 이전 복원한 것, 분수대 보수공사 시행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28) 광주시가 2014년에 수행했던 ‘민주인권평화컴플렉스 조상사업 기본계획’은 이전 예정인 광주교도소 부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외에도 505보안부대 주둔지와 국군광주통합병원 부지 등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담론에서 문화도시 혹은 인권도시 담론으로 전환되면서 재해석되고 변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5·18을 과거의 사건에서 현재의 사건으로 재설정하고, 5·18이 당면한 과제들이나 바람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역사적 자원으로 재고되기 시작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는 5·18에 관한 정치·사회적 평가와 제도화의 내용에 따라 관점을 달리하면서 접근되었다. 5·18은 문화도시와 인권도시의 담론에서 재해석되면서 점점 다른 모습의 얼굴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것이 5·18의 참모습인지, 아니면 화장을 한 모습인지는 미래에 알게 될 것이다. 문화도시는 5·18을 역사문화 자원의 시선으로 보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활용의 관점에서 파악했다. 인권도시는 5·18의 의미를 변용 혹은 확대하여 다른 도시들과 다른 광주의 차별성을 지향하기 위한 전략적 소재로 삼았다. 5·18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기념사업의 형태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5·18기념사업을 대면하는 시각의 차이, 기억투쟁인가 또는 유산산업인가로 대별되었다. 기념사업이 어떤 시각에서 추진되는가에 따라 주요하게 선택했던 형태도 달라졌다.

5·18의 청산과제들이 해소되는 것과 비례하여 지역화 양상은 한결 강화되었다. 또한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해석의 함의가 미화되었고, 가치의 다양성보다는 유연적인 정형화를 유도하는 힘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를 우려하는 주장들이 일찍이 제시되었지만, 5·18의 사회적 기억을 유지했던 핵심적인 기반의 약화와 축소를 차단할 만큼 경각심을 심어주지는 못했다. 비단 그 이유를 5·18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관계의 변화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1990년대에 들어 한국의 사회운동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좌초했던 것(김동춘, 2000)이 더 근본적인 이유일 터다. 그렇지만 대내외적으로 5·18을 바라보는 시선과 공감대의 기반과 수준이 크게 달라졌으며, 5·18의 역할과 영향력이 극히 축소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와 별개로 성찰과 숙고가 요구된다는 문제제기는 주목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지역 내부에서만 메아리치거나, 지역 이데올로기로 매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엄혹한 현실인지 모른다. 이런 현상은 광주가 대외적으로 5·18의 현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해석의 독점을 강조하여 외화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강문구 (2003). <한국민주화의 비판적 탐색>. 서울: 당대.
- 강운태 (2014). 인권도시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2014 세계인권도시포럼 전체회의 I 발표 자료집.
- 광주광역시 (1995). <5·18묘역성역화사업 실시설계보고서>.
- 광주광역시 (2000).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 기본계획>.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 (1999). <문화예술이 광주를 살릴까?>.
- 광주광역시 복구 (2000). <사이버 민주·인권 엑스포 마스터플랜 수립>.
- 김기곤 (2009). 5월행사의 의미변화와 '5·18'의 문화화. <지역사회학>, 11권 1호, 171-201.
- 김기곤 (2010). 옛 전남도청별과 갈등과 '5·18'의 의미 탐색. <지역사회연구>, 18권 2호, 67-90.
- 김기곤 (2013). '열린 공동체' 관점의 인권도시와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인권>, 13권 2호, 237-265.
- 김동춘 (2000). 한국 사회운동의 현주소. <황해문화>, 29호, 10-25.
- 김동춘 (2001). 5·18, 6월항쟁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5·18민중항쟁사> (594-620쪽).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 김두식 (1998). 5·18에 관한 의미구성의 변화과정과 지역사회의 변화. 한국사회학회(편).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213-256쪽). 서울: 나남출판.
- 김영기·김혜선 (2013). 인권도시 광주, 주요 관계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3권 3호, 115-165.
- 김호균 (2002). 일상문화, 생활문화에서 바라본 5·18기념사업. <기억·장소·축제> (53-55쪽). 광주: (재)광주비엔날레, (재)5·18기념재단.
- 김희송 (2013). 5·18역사 왜곡에 대한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 14권 3호, 5-35.
- 나간채 (2004). 인권운동의 측면에서 본 5·18항쟁. <지역사회연구>, 12권 2호, 1-21.
- 나간채 (2007). 5월운동에 있어서 의미들의 형성과 발전. <지역사회연구>, 15권 3호, 3-21.
- 류재한 (200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과 5·18. <민주주의와 인권>, 7권 2호, 117-131.
- 문병훈 (20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다시 생각한다>. 서울: DOCU.
- 문화체육관광부 (200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 박기덕 (2006).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울.
- 박해광·김기곤 (2007). 지역혁신과 문화정치. <경제와 사회>, 75호, 39-75.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 (1995). <전남이미지 실태연구 -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 안종철 (1998). 5·18 성지 순례단 유치 대책. <5·18정신 계승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 오승용·한선·유경남 (2012). <5·18왜곡의 기원과 진실>. 광주: 5·18기념재단.
- 5월 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1994). <진실은 발자국에 고여 있다>.
- 이용기 (1999). 5·18에 대한 역사 서술의 변천. <5·18은 끝났는가> (393-419쪽). 서울: 푸른숲.
- 이용연 (1999). 5·18과 광주 도시구조의 변화. 전남대 5·18연구소 제10회 학술 집담회.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5·18 관련 사적지 조사 및 보존에 관한 기본 조사 설계>.
- 전남일보사 (1994). <5·18광주기념사업을 위한 세계 민주성지를 가다>.
- 전라남도 (1996). <5·18기념사업 종합계획>.
- 전재호 (1999). 5·18 담론의 변화와 정치변동. <5·18은 끝났는가> (238-265쪽). 서울: 푸른숲.
- 정근식 (1997). 민주화와 5월운동, 집단적 망탈리테의 변화. 나간채 (편),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163-204쪽). 광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정근식 (1999). 집합적 사회운동, 시민운동, '지역발전'. <지역사회학>, 창간호, 149-168.
- 정일준 (1994). 5·18담론의 변화와 권력-지식관계. <민주주의와 인권>, 4권 2호, 101-123.
- 정호기 (1996). 지배와 저항: 그리고 도시공간의 사회사. <현대사회과학연구>, 7권, 239-272.
- 정호기 (2012). 시민사회의 사회운동 기념물 건립과 표상. <경제와 사회>, 94호, 308-338.
- 조현연 (2001). 5·18진상규명 투쟁과 광주청문회. <5·18민중항쟁사> (713-744쪽).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 최장집 (2007). 한국 민주주의와 광주항쟁의 세 가지 의미. <아세아연구>, 50권 2호, 144-184.
- 최정기 (2008). 5·18기념공간과 사회적 갈등. <민주주의와 인권>, 8권 1호, 51-78.
- 한국사회학회 (편) (1998).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서울: 나남출판.
- 허연식 (2002). 5·18기념사업에 대한 반성과 전망. <기억·장소·축제> (37-43쪽). 광주: (재)광주비엔날레, (재)5·18기념재단.
- 허윤철·강승화·박효주·채백 (2012). 한국 언론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담론. <한국언론정보학회>, 58호, 130-155.
- Cuche, D. (2004). *La notion de culture dans les sciences sociales*. 이은령(역) (2009). <사회과학에서의 문화 개념>. 서울: 한울.
- Bevan, R. (2006). *The destruction of memory: Architecture at war*. 나현영(역) (2012). <집단기억의 파괴>. 파주: 알마.
- Finkelstein, N. D. (2003). *The Holocaust Industry*. 신현승(역) (2004). <홀로코스트 산업>. 서울: 한겨레신문사.
- Kaye, H. J. (1991). *The powers of the past*. Harvest.
- 투고일자: 2015. 04. 01 게재확정일자: 2015. 05. 22 최종수정일자: 2015. 05. 27.

Change of Meaning for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Memorial Projects

Focusing on a Holy Ground for Democracy, a Cultural City and a Human Rights City

Ho-Gi Jung

Lecturer, Dept. of Soci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has been considered to be specific case of the big deviation in social memory among the events that occurred after the Korea War. Compared with other events associated wit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s special in that can be achieved various changed meaning. In this study, primary focus will be on the background and logics to show what changed the meaning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memorial project. And to investigate influences of change of meaning on perspectives and forms of memorial projects.

Recognition and forms of memorial projects on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had been largely changed around 2000s. Memorial projects were the aspects that are the logics of the social movements absorbed into the logic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before 2000s. During this period, it was done primarily the discourse of a holy ground for democracy and sanctuarization, had characterized the nature of the struggle of memory. After 2000s,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has been interpreted historical resources to create a cultural city and a human rights city. Sometimes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was appropriated by local development discourse, and sometimes was adopted as the material of differentiation strategy in the city. Form of memorial projects has also been changed type of struggle of memory to type of heritage industry.

KEYWORDS May 18 Democratic Movement, change of meaning, memorial project, holy ground for democracy, cultural city, human rights city